

시설공단·학생인권 조례안 촉각

제390회 임시회 17일 개최... 23일까지 7일간 제주도·도교육청 제출 마지막 추경안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마지막 추경안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각종 조례안 등의 안전 심사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시설공단 조례안'과 '학생 인권 조례안'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마지막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앞서 제주도는 도의회에 기정예산(6조1513억원)에서 805억원(1.31%) 증액된 6조2318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교육청은 기정예산(1조2326억원)에서 360억원

이 감액된 1조196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18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 후 21일과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지만 신규 예산을 편성해 그대로 이월시키는 관행은 물론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검토가 미흡해 예산을 그대로 삭감하거나 집행률 저조와 과다 이월의 문제까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사례 또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러 "올 한해 경제 한파 속에 민생 현장에 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 것인지 걱정이 크다"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기초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재정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선별해 감액조정하고, 태풍피해 복구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 등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했다"면서 "이번 제3회 추경이 올 한 해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도록 심의·의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기반으로 올해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새해 새 학년을 준비해나가려 한다"면서 "이번 예산을 활용해 학교 현장에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검사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14명으로, 전날(1078명)보다 64명 줄었으나 이틀째 1000명대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당장 3단계 안 간다 "더 지켜보며 결정"

거리두기 상황은 방역통제 상실·의료 한계 '여력 있다' '차근차근 논의 중... 급작 결정해 발표할 일은 없을 것'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선 가운데 아직 격상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한계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지금 당장 3단계로 격상할 시점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특히 지난 주말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데 선제 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방역통제망·의료체계 수용 능력, 어느 정도 여력 갖고 견뎌내는 상황"=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코로나

19 상황 백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3단계 격상에 있어 '키(key) 질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직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면서 "어제 (SNS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의 '3차 대유행'이 지난 8~9

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3단계 효과성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정"=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시 3단계 격상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를 올리게 되면 효과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면서 단계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병상 확보나 다른 인프라 확대 부분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3단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함께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수배송비 인하 의견 힘 모아주세요"

도서지역 비용 개선 촉구 오는 27일까지 국민청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해부터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함으로써 관련업체 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특수배송비의 인하를 유도해 왔다.

또한 특수배송비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정비 등의 후속 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제주 등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도민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내 여성단체협의회 및 전국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홍보활동을 벌

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1만 1873명으로 목표인원 20만명 대비 6%, 국회 국민청원은 3837명으로 목표인원 10만명 대비 3%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20만 명의 동의 인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소비자 주권 확보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청원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도 내년 상반기 고위직 인사 촉각

고위공무원 명퇴 등 인한 연쇄 승진·자리 이동 예상

내년 1월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상반기 정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승진 폭과 인사 규모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 최고위직인 국장급(3급 부이사관 이상) 3명이 명예퇴직을 신

청한데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도 대거 공로연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연쇄적인 후속 승진과 자리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장급의 명예퇴직과 공로연수에 따른 후임 인선이 최대 관심사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과 오정훈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이 이달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사무

관 2명도 명퇴를 신청했다.

정년퇴임 1년을 앞두고 시행되는 공로연수 대상자는 서기관급 이상만 20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공로연수는 1961년 하반기 출생 간부공무원이 대상이다.

도관계자는 "공로연수 대상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조만간 시행계획을 확정, 공직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로연수 등 정기인사 시행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인사 폭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오은지기자

민주당 오늘 4·3특별법 개정 최종안 결정

유족회 회장단 등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온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18일 오전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은 대 표가 1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 4·3희생자유족회 신·구 회장단과 양 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민주당 대변인과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배석한다.

당정청이 최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 조항과 관련한 최종 조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간담회 명칭에서 보듯 이 자리에서는 핵심 쟁점인 배보상 부분과 관련해 유족

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청은 최근 회의를 통해 법 개정 방향을 두고 '4·3 희생자들에게 배·보상한다', '보상금 기준과 지급 절차 결정을 위해 6개월간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상 비용을 포함시켜 2022년도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세웠다. 다만, 재정당국이 부담을 보이는 보상 조항에 대한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부미현기자 bu8885@ihalla.com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안내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추가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1 신고 기간

2021. 1. 1. ~ 2021. 6. 30. (6개월간)

2 신고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제주도민회, 재외공관(미,일)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현주소지 또는 4·3사건 당시 거주지의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 타시,도 거주 재외도민 :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에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로 우편신고
- 외국 거주 재외도민 : 재외공관(미,일) 및 재외제주도민회에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로 우편 신고
- ※ 우편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우)63122

3 신고 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47. 3. 1을 기점으로 '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 9. 21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1명

4 신고자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5 신고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타시,도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대한민국민단, 재외공관에 비치된 신고서를 교부 받아 신고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신고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고서에 첨부할 증명서류
- ① 희생자 신고 :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
- ② 유족 신고 : 유족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 ③ 후유장애자 신고 :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
- ④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제출
 -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2인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 ※ 외국거주자로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2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문의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리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044-205-6564, 6562, 6563)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434, 8435, 8436)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5),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4)
 제주도내 읍면동 4·3업무담당